

광주시, 코로나 예방 범시민 캠페인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속 재확산 우려 경각심 고취 시민단체·공무원 등 4천여명 참여... 해외입국자 2명 확진

광주시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대대적인 범시민 캠페인에 나선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전환했지만, 자칫 방심할 경우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날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은 시민사회 단체와 자생 단체,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4000여명이 참여해 광주시내 주요 교차로와 다중 이용시설 등 320여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첫 날인 이날 오전에는 이용섭 시장이 자원봉사자 등 70여명과 함께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을 홍보했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매주 월요일 출근 시간에 광주 전 지역에서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조치로 인해 시민 방역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시민 개인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해 코로나19 재유행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련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등이 나올 때까지 일상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밀접접촉 금지,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개인 방역 수칙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위드(with) 코로나19'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됐지만 조금의 안일과 방심은 언제든지 재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며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207·208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으로, 곧바로 격리조치 됐으며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달 2일부터 이날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가 지난 3일부터 1단계로 완화했다.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사거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새마을회,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1단계 완화 첫날인 지난 3일 광주 서구에서 자가격리 중인 20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날 해외 감염 사례도 두 명 더 추가됐다. 206번 확진자는 202년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206번과 207번, 208번 확진자 모두 자가격리 중이어서 별도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수해 피해 이웃돕기 성금모금

광주일보사는 한국신문협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2020 수해 피해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부산, 경북 영덕·울진, 대전, 충북 청주 등 전국 곳곳에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과 피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20년 8월 5일(수) ~ 2020년 8월 31일(월)
- 계좌번호 : 농협 106906-64-003747
국민은행 054990-72-003752
기업은행 001-000375-93-285
신한은행 5620-28-88597633
우리은행 001-098482-18-953
하나은행 061-04-00051-686

- 예금주 : 재해구호협회
- 인터넷 기부 : 희망브리지 홈페이지 (www.relief.or.kr)
- 휴대폰 문자 기부 : #0095 (1건당 2,000원)
- ARS 기부 : 060-701-1004 (한 통화 3,000원)
- 성금 모금 안내 : 1544-9595

光州日報社 · 한국신문협회

日, 징용기업 강제매각 시 맞대응 예고 대구지법, 일본제철 PNR 주식 압류 명령 공시 송달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표하자 일본 각료들은 강제 매각 시 맞대응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사야 하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선택지로 거론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를 의미함)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 정부에 반복해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역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사야 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자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판결과 관련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지법 포함지원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를 올해 1월 압류했다.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은 이날 0시에 발효됐다.

일본제철이 송달 완료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인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된다.

일본제철은 이날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공공재건축 제도·신규부지 발굴 확장

수도권에 13만2천가구 공급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줄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

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료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보통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상암 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연합뉴스

"청년기본법 시행 맞춰 관련 조례 개정해야"

광전연 '정책 브리핑'

5일부터 시행하는 '청년기본법'과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는 조례 조항 신설과 함께 지역사회의 내에서는 공감대 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심미경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전남 정책 브리핑'에서 광주·전남의 청년 관련 조례와 정부의 청년기본법을 비교 분석해 지역 청년 정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심 위원이 분석한 결과 청년 연령의 정의가 광주·전남의 청년 기본 조례는 모두 39세까지로 규정돼 있는 반면 '청년기본법'에서는 상한을 34세로 규정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또 청년정책 연구에 대한 조항 등이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에 대해서도 조례에 별도로 명시 안 돼 있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모두 청년 권익을 위한 의무 시책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이나 청년센터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에 제

시돼 있을 뿐 구체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의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은 '청년기본법'과 지자체의 청년정책 기본 조례의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 내용 및 대상자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 지역 청년 관련 조사·연구·통계 생산 및 활용에 있어서 한계 발생, 청년 관련 정책·제도별 대상자 혼란·비효율성 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날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 청년 경제 상태와 일자리·보전복지·생활·문화환경 조사 시행, 소속 공무원 중 청년정책 책임관 지정 등이 담겨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 제정에 앞서 청년 조례를 제정했으며, 심 위원은 법 취지와 내용에 맞게 청년 연령, 지자체 의무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은 "'청년기본법'과 지역 청년 정책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청년의 정의·지자체 의무 조항 이행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본명 조영진

서울에서 스쿠일렌 사업했을 때 이름 김홍삼

내 돈 같아요 안값으면 고소할게요

신은선 010-3305-9974

분묘 개장 광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임의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보성군 용치면 봉신리 산194번지
2. 분묘가수 : 분묘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방법 : 무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정계동로 457 (재이름다른 정계공원)
7. 안치기간 : 10년
8. 기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검출합니다.
9. 신고처 : 주식회사 하늘현 (전화 : 062-232-0850 / 010-2700-1400)

2020년 8월 5일
공고인(토지소유자) : 박형태
대행사 : (주)하늘현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지 266-7601
	·용 북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75-5530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아 675-6605	·진 평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임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